

청소년 범죄, 더 독해졌다... 폭력 · 성범죄 · 지능범죄 증가

경찰청, 올해 상반기 청소년범죄분석 발표
 13세 촉법소년 범죄율, 전년대비 15% 증가
 절도 감소했지만 폭력 · 지능범죄 각각 급증
 전과 3범 이상 51%, 강도 재범률 평균 63%
 형사 미성년자 13세 미만으로 법개정 주목



청소년 특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10~13세)이 저지르는 범죄가 양적으로도 늘었고 질적으로도 지난해에 비해 더 흉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통계여서 주목된다.
 경찰청이 18일 내놓은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분석'에 따르면 촉법소년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3167명→3416명)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소년법 개정시 범죄소년으로 편입되는 13세의 범죄증가율이 1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세(12.1%)와 12세(5.0%)는 감소했고 11세(7.0%)에서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는 2.3% 줄었고(1727명→1687명) 폭력(21.0%)이나 지능범죄(33.7%)가 늘어 범죄소년(14~18)의 현황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죄소년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9% 감소(3만5427명→3만2291명)했지만 폭력범 비중(30.4%→32.3%) 및 가중규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비중(34.7%→35.1%)이 증가했다.
 재범자 중 3범 이상이 절반이 넘는 50.8%를 차지하고 있고 강력범인 강도 재범률이 평균 63.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언어폭력(106.8%)과 추행 등 성범죄(49.9%)가 늘어 학교폭력도 5.7% 증가했다. 학교폭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폭력사안은 11.1% 감소하긴 했지만 구속인원이 32.3% 늘었다. 범죄의 강도가 그만큼 세졌다는 뜻이다.
 이 같은 결과에 경찰청은 강력법과 경미범을 명확히 차별화하는 정책을 쓸 방침이다.
 강력·집단범죄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주범 피의자는 구속하는 등 적극적 수사로 청소년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고위험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도 6개월간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소년법을 조사할 경우 수사부서는 즉시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경미한

소년법에 대해서는 수사초기부터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을 실시해 체계적 선도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수사부서와 신속하게 연계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피해자 및 교사 면담을 통해 집단에 의한 고질적 폭력인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안 형사처벌 면제 연령 '만 14→13세' 하향조정

정부가 나날이 흉포화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안으로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만 18세 미만 소년법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 집단 폭력 사건'과 관련해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공석인 경찰청장 대신 참석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장은 부처별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청소년 범죄를 엄정히 수사하고 전국 단위 피해 학생 전담 기관을 기존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는 등 피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선도 교육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기관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제약하고 있는 법률적 한계 등을 분석해 현상

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완책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안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명예보호관찰관을 기존 800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늘리는 등 재범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지극적인 폭력 등 유해 영상물에 대한 심의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범부처가 공동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 지원체계(CYS-Net)로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상담 분야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인 청소년 동반자를 1146명에서 1261명으로 비행·일탈 등 위기청소년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아웃리치 전문요원'을 3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장은 "청소년 폭력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학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전국 50개 청소년 경찰학교를 활용해 체험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할 때 개인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가해자 선도 교육에 내실을 기해달라"면서 '범부처와 공동으로 청소년 폭력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8월 사회관계장관 회의에 후속 보완 대책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

- 끊이지 않는 청소년 폭력에 메스
- 김상곤 부총리 관계장관 긴급회의
- 피해학생 전담기관 1→3곳 확대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